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한반도

홍 용 표 (한양대학교)

◆ 논문 요약 ◆

본 연구는 첫째,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과 지역안보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안정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회의론 및 자유주의적 낙관론의 주장, 그리고 두 논지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 시각을 분석하였다. 둘째, 안보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 증진 전략을 검토하였다.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적 처방과 자유주의적 처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역내 국가들간의 불신을 고려하여, 주로 지방 정부나 사기업들의 주도에 의해서 인력, 자금, 기술 등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 교류되는 '국지적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을 확대함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는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앞

으로 지역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향해 및 동해경제권에 참여시켜 남북교류와 지역경제협력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지적 경제협력에서는 국가의 역할보다 지방정부 및 기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남북간 상호 불신 및 긴장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이미 중국의 동북 3성 및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지역협력에 참여시킬 수 있다. 셋째,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희석시킬 수 있다. 넷째, 따라서 남북교류와 지역 경제협력의 상승작용을 통한 '호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이 중국횡단철도 및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우, 한반도는 지역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 머리말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는 20세기의 그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

을 보일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탈냉전 이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중소간의 대결 구조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한·소 수교, 한·중 수교 등 탈냉전적 양자관계의 재조정과 다자간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안보개념인 군사안보 외에도 경제·환경 등 비군사적 안보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지역국가들의 갈등과 협력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이 지역의 국가와 국민들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온 경제발전에 버금갈 만큼 지역 평화를 지속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상호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정치안보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가 21세기에도 '분쟁지역'으로 남아 위기와 갈등으로 점철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상호협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패권주의적 외교정책과 이에 대항한 중국 및 러시아의 협력,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와 이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동북아에서 위기감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역동성 및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안보협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역내에 보다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제안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안보질서 수립을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의 확대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증진은 남북교류는 물론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과 지역안보와의 관계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안정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회의론 및 자유주의적 낙관론의 주

장, 그리고 두 논지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 시각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둘째, 안보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 증진 전략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의 지역안보와 경제협력을 확대함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할 것이다.

II. 동북아의 경제적 역동성과 지역안보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특히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논의는 대체로 '낙관적 시각', '회의적 시각', 그리고 '중도적 시각'으로 나뉘어 진다. 낙관론자들은 무역 및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대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자유주의적' 모델을 내세우며,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과 이 지역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다자 조직 및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현실주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회의론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평화는 국가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나 혹은 어느 일방이 다른 나라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회의론자들은 탈냉전기 동북아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치변화는 국력의 변화와 세력관계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중도적 입장은 낙관적 시각과 회의적 시각이 모두 너무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현재 동아시아에는 안정적 요인과 불안정적 요인이 혼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억제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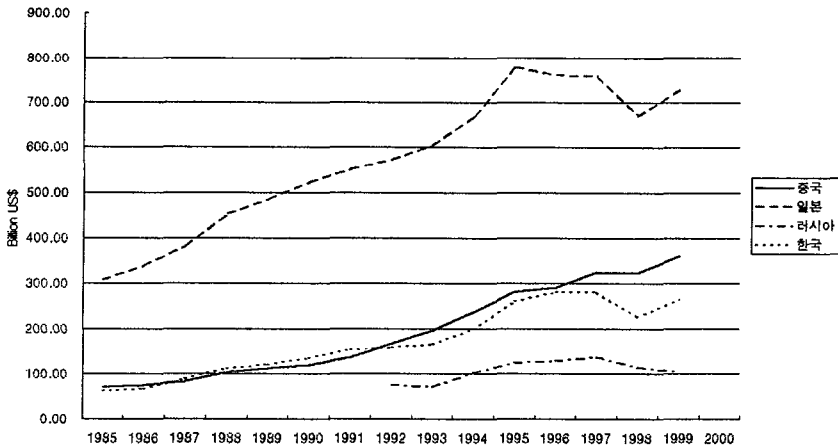
1. 낙관적 시각

자유주의적 낙관론은¹⁾ 경제성장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가져오는 '평화적 효과'를 강조한다. 국가간 무역확장과 상호의존성의 확대는 서로 협력할 경우 누릴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증진시키는 한편, 전쟁의 비용은 더욱 증폭시킨다. 또한 확대되는 상호의존을 관리하고 안정적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형성이 촉진됨으로써 국가들 간의 평화적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런 관점에서 낙관론자들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에 주목한다. 동아시아의 경제는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겪은 1997~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전체 규모 면에서 아시아의 수출 및 수입 비중은 1980년 세계전체의 15.9% 및 16.9%에서 2000년 28.7% 및 24.9%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역내 수출비율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여 1985년의 34%에서 1996년에는 51.9%로 증가하였다. 아시아가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인 99년에는 역내 수출비중이 46.6%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다시 48.9%로 증가하였다. 이는 유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미지역과는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역내 투자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²⁾

-
- 1)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Ming Wan, "Wealth and Power: Economic Transformation of Securit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18, No. 2 (Spring 1996), pp. 20~21 & 69; James Richardson,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No. 38 (Winter 1994/95), pp. 28~39; 정진영,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동아시아 불안정론에 대한 비판,"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1997), pp. 153~186.
 - 2) 강명세,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가능할 것인가?" 진창수 편,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2), pp. 18~20; 박번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1. 11), 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11103&search_gubun=1&sYear=2001.

[표-1] 동북아 주요 국가의 무역량 변화, 1985-2000



출처: 이호철, “탈냉전 동북아 세력균형과 상호의존” (2001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1. 12. 5), p. 5.

따라서 낙관론자들은 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활동 증대는 역내 국가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시키는 대신 적대감과 마찰의 위험성을 줄일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안보 연계의 좋은 예이다. 중국은 역내 안보질서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대만과의 관계,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군사력 증강 등의 요인들에 근거한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부가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안보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중국이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에 깊이 참여함으로써 얻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중국 경제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에서 중국의 남부해안지방, 대만, 홍콩,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이르는 역내 지역경제 속에 긴밀하게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³⁾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에 힘입어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상호

3) 이호철, “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안보와 경제의 상호관계,” 『국제정치경제연구』 제1집 (1997. 12), p. 55.

의존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협력 제도화 시도 또한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범과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규범과 규칙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의 성공적인 관리 경험이 축적되어 가면 지역내 경제관계는 더욱 제도화되어 갈 것이고, 국가는 이러한 제도들을 준수함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되는 반면, 이러한 제도들을 우회하는 비용은 증대하게 된다. 그 결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국의 안보이익을 추진하려는 행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규칙과 규범의 협상과 제도의 형성을 통해서 국가간 상호의존의 성공적인 관리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 국가가 자국의 안보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APEC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아태 국가 사이의 느슨한 경제협의체로 시작된 APEC은 상당한 수준의 제도화의 효과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⁴⁾ APEC의 일차적 목적은 역내에 증대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관리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APEC은 보다 근본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강화유지되는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시장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접근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의 일방적이고 양자적인 압력을 제어하고, 미국의 적극적 참여를 지속시켜 일본의 경제적 지배와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며, 중국을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의 망으로 적극 참여시켜 잠재적 안보위협을 감소시킨다는 정치적, 안보적 고려가 APEC의 근거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⁵⁾

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낙관하는 또 다른 이유로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확산은 역내 국가들간의 갈등과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⁶⁾

4) APEC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Woo Sik Kee et al.,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Issues and Prospects*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5), 특히 Part I 참조.

5) 이호철, “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pp. 54~55.

6) 이와 같은 입장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소위 ‘민주평화론’에

자유주의 모델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장래를 더욱 밝게 만든다. 이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가능케 하며,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정치 민주화를 촉진하며 인권보장을 가능케 한다. 또한 중산층, 지식인, 사업가 및 전문직 종사자 등 각종 사회그룹의 성장 및 활성화를 가져온다. 이들 집단은 수입이 늘어나고 사회적 위치가 증진될수록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달라는 요구와 압력을 행사한다. 또한 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보게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들의 국가를 향해 더 많은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의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는 여당 세력의 권력 독점화 전통이 이미 무너졌으며, 필리핀에서도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아직 적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이 비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민주화 투쟁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침체기에 처해 있고, 미얀마와 베트남에서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경직된 공산주의 독재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보다 많은 자유와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 자유주의 낙관론자들은 이러한 민주화의 과정이 곧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며, 따라서 이 지역에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⁷⁾

한편 일부 낙관론자들은 동아시아의 장래가 밝은데도 불구하고 '불안정론'이 제기되는 것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불안정과 갈등이 미국과 유럽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불안정하게 되면 동아시아로부터의 경제적 도전이 약화되고 막대한 군수산업의 시장이 등장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증대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주로 서구 학자들이 동아시아

바탕을 두고 있다. Michael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참조.

7) 동아시아에서 민주평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현인택, "민주평화와 동아시아의 미래," 이상우,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서울: 오름, 1998), pp. 235~271 참조.

아의 불안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논리이다.⁸⁾

2. 회의적 시각

동아시아 미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⁹⁾ 현실주의적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는 힘의 균형과 전력적 평형의 움직임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은 탈냉전기 동북아에 나타나는 힘의 다극화 양상은 국가들 간에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불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들로 하여금 군사력 팽창에 더 매달리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제력과 군사력의 팽창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장차 아시아에서 현상변경을 요구하고 나설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어 위협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의 증대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 이들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협력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호의존적이고 자유로운 세계경제질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는 국가들간에 큰 차이가 있고, 설사 일본과 같이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마저도 높은 수준의 비판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역동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국가들간의 상호의존 수준은 유럽에 비하여 크게 낮다. 물론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의존 수준이 높아지겠지만, 이 경우에는 지역경제기구의 부재

8) 예를 들어 정진영,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p. 185 참조.

9)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Aaron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pp. 5~24; Barry Buzan, and Gerald.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 (Summer 1994); 김태현, "신세계질서와 동아시아: 한국의 선택,"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1997), pp. 7~42; 안청시, "21세기 동북아 안보질서,"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pp. 273~292.; 한태준,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경제낙관론에 대한 비판,"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pp. 131~152.

로 인하여 상호의존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기 힘들 것이다 다른 한편, 불평등한 상호의존관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셋째, 경제적 상호의존이 반드시 긴장과 갈등에 대한 방어책은 아니다. 즉, 설사 상호의존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증대는 곧 갈등을 초래하고 간섭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전략적 자원과 해로의 확보 필요성은 힘의 사용을 종종 정당화시킨다. 또한 어느 일방이 핵심적 안보이익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상대국과의 경제관계가 아무리 긴밀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를 지키려 할 것이며, 때로는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과 중국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독립이나 중국통일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나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위협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¹⁰⁾

넷째, 동아시아의 다자주의와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유럽 등과는 달리 최근에야 시작되었으며, 그 진전 상태도 느리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울러 동아시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구들이나 태동중인 협력방안들도 상호신뢰와 자신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¹¹⁾

아울러 최근 야기된 일부 동아시아 국가의 금융경제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적 혼란을 유도, 지역 전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동아시아의 민주화 추세에 대해서도, 비록 이 지역의 민

10) 이 문제와 관련, 코사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오히려 주변 위협에 대해 잘못된 대비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1990년 이라크가 군대를 쿠웨이트와의 국경에 전진 배치 시켜 전운이 높아졌을 때, 쿠웨이트 정부관리들은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경제적으로 많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쿠웨이트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Ralph A. Cossa & Jane Khanna, "East Asi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 (April 1997), p. 224.

11) 이와 관련 부잔과 시갈은 동아시아는 다자주의의 씨를 뿌리고 성장시키기 힘든 곳이라고 강조한다. Buzan &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p. 16.

주화가 크게 진척되기는 했지만 지역 전체로 볼 때, ‘민주평화론’의 가설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정치문화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고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적 회의론자들은 동아시아 지역 내의 고유한 분쟁가능요인들 또한 지역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지적한다. 한반도 분단과 대만 문제는 이 지역 최대의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남아있다. 여기에 북방열도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간의 영토분쟁, 남사군도에 대한 주변국들간의 긴장과 분쟁 가능성도 동아시아 평화의 위협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중국, 북한, 캄보디아 등의 국내정치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또한 지역안보질서에 충격과 파장을 미칠 수 있다.¹²⁾ 최근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간의 대립과 이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 조성은 회의론자들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힘의 사용에 대한 제한체제나 책임감 또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이 지역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¹³⁾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자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드버그(Aaron Friedberg)는 유럽과 달리 탈냉전 시대 동아시아는 군사적 경쟁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며, “유럽의 과거가 동아시아의 미래”라고 주장한다.¹⁴⁾

3. 중도적 시각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측함에 있어서 탈냉전 초기에는 현실주의 혹은 자유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동아시아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예

12) 동아시아에서의 갈등 요인과 지역분쟁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권호연, “동아시아의 갈등요인: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pp. 43~58; 홍규덕, “동아시아의 지역분쟁,”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pp. 91~130.

13) Jonathan Pollack, “Sources of Instability and Conflict in Northeast Asia,” *Arms Control Today* (November 1994), p. 3.

14) Friedberg, “Ripe for Rivalry,” p. 7.

측하거나 혹은 낙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론과 낙관론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바람직한 안보질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행동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는 시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¹⁵⁾

중도론자들은 회의론과 낙관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회의론과 낙관론은 모두 일방적이고 결정론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즉, 경제와 안보의 관계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¹⁶⁾

둘째, 현실주의적 회의론이건 자유주의적 낙관론이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는 불완전하다. 현실주의적 비판론은 탈냉전의 구조적 조건에만 분석의 초점을 두고 '다극화의 역동성'이 야기할 불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과 제도의 형성 등 국제정치 '과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유주의적 낙관론은 이와는 반대로 구조적 제약성과 역내 안보 위협적 요인들은 지나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¹⁷⁾

셋째, 경제와 안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회의론과 낙관론의

15)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Cossa & Khanna, "East Asi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Security," pp. 219~234; Chung-in Moo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Implications for Security in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Vol. 19, No. 2 (Fall-Winter 1995), pp. 29~52; Gerald Segal, "How Insecure is Pacific Asia?"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 (April 1997), pp. 235~249; Dennis Patterson, "Security in Post-Cold War Northeast Asia: The Problem of Theory," in Kwang Il Baek, ed., *Comprehensive Security and Multilateralism in Post-Cold War East Asia* (Seoul: KAIS, 1998), pp. 3~24; 김국진, "동아시아의 평화질서,"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pp. 197~218; 이호철, "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안보와 경제의 상호관계," 『국제정치경제연구』 1(1997. 12), pp. 49~60.

16) Moon, "Economic Interdependence," p. 33.

17) 이호철, "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pp. 56~58; Segal, "How Insecure is Pacific Asia?," p. 249.

논쟁은 안보를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종속변수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코사(Ralph Cossa)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경제, 정치, 안보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고려가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 혹은 안보문제는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¹⁸⁾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성은 지역 안보증진을 위한 안보논리와 역동적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논리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와 안보는 상호작용하면서 지역안정성을 강화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즉, 그 결과는 악순환(vicious cycle)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호순환(virtuous cycle)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¹⁹⁾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중도적 시각은 ‘현실에서 어떻게 경제와 안보간의 상호작용이 호순환 하도록 관리하여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킬 것인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문정인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안보 사이에는 인간과 그들의 의향, 의지 그리고 계획이 놓여 있으며, 인간은 양자간의 연계를 목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²⁰⁾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내 갈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관리’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간의 무역량 증가와 갈등의 관계를 분석한 허태희는 무역을 통한 국가간 경제적 연계가 그들간의 협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내 상호의존성 증가가 반드시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²¹⁾

18) Cossa & Khanna, “East Asi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Security,” p. 223.

19) 이호철, “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p. 56.

20) Moon, “Economic Interdependence,” p. 33.

21) Tae-hoi Huh,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s in the Asia-Pacific,” *Asian Perspective*, Vol. 21, No. 1 (Spring-Summer 1997), pp. 233~258.

Ⅲ. 안보, 경제 그리고 지역협력 강화 전략

동아시아에는 역내 질서에 대한 안정적 요인과 불안정적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점차 증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없는 추세가 될 것이며,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경제적 역동성은 이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는 다양한 지역내 갈등 및 분쟁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실주의자들이 강조하듯이 이로 인한 안보환경의 변화 또는 위협은 역내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증대하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유동적인 안보관계를 긍정적 상승 작용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아시아의 장래에 대한 현실주의적 분석이나 자유주의적 분석은 모두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론적 틀에 기초한 그들의 분석이 이 지역에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행동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데 유익한 준거기준을 마련해주는 것도 분명하다. 즉, 양쪽 주장은 각각 동아시아의 미래를 예측하고 해결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충분조건은 될 수 없어도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양쪽의 주장 중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역내 세력균형의 유지를 위한 균형자가 필요하다. 19세기 서구세력이 동아시아에 침투한 이래 이 지역의 세력균형은 주로 외부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²²⁾ 따라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 소련의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미국도 필리핀 기지를 폐지하는 등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과 이에 따른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현실주의자들은 군사적·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한 역내 권력투쟁과 이에 따른 지

22) Michael Yahuda,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Asia-Pacific* (London: Routledge, 1996), pp. 1~17.

역 불안정성을 우려하였다.²³⁾

1995년 2월 미 국방성이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전략보고서(EASR)'에서 미국이 계속 동아시아에 10만명 정도의 군대를 상주시키는 등, 아시아에서 "개입 및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힘의 공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이 추구할 이익으로서 ① 평화와 안보, ② 지역에 대한 상업적 접근, ③ 항해의 자유, ④ 패권국가의 등장 방지 등을 제시하였다.²⁴⁾ 현재 미국의 이러한 세력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이 균형자의 역할을 넘어서 패권을 추구할 경우 이는 오히려 동아시아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힘을 앞세운 외교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대외정책의 전략적 중심 축을 아시아로 옮긴다는 원칙이 포함된 '원 플러스(One-Plus)' 전략을 미국의 새로운 전략 틀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이에 입각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한국, 호주와 보다 긴밀한 안보유대를 형성해야 하며, 일본의 군사력은 아시아 지역의 미군사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긴밀하게 통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로 인식한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동맹을 유지·강화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23)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는 David Shambaugh, "Growing Strong: China's Challenge to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 (Summer 1994); Gerald Segal, "East Asia and the 'Constrain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Spring 1996), pp. 107~135.

24)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이 보고서의 작성을 주도한 나이(Joseph S. Nye)는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July/August 1995), pp. 90~101에서 상기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추진하고 있다.²⁵⁾ 이와 같은 미국의 공세적인 외교정책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9·11 테러사태 이후 세계 국가들에 대해 테러를 지원하는가 여부에 따라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대외정책 기준을 세운 것도 동아시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안정적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외부 균형자' 뿐만 아니라 '내부 균형자'가 필요하다. 현재 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을 단독으로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중국과의 세력다툼 및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유산으로 인한 주변국들의 반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는 다자 기구가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낙관론자들이 선호하는 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의 활성화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로 ASEAN 지역포럼(ARF)을 들 수 있다. 1994년 설립된 이 기구는 신뢰 구축조치의 증진, 예방외교 개발, 분쟁에 대한 접근법의 정교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RF는 동아시아 지역내의 유일한 안보 및 협력을 위한 대화협의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미·일·중·러 등 역내 주요 국가들에게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⁶⁾ 특히 ARF는 1995년 브루나이 회의에서 남사군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확보하는 등 지역분쟁의 해결은 물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⁷⁾ 아울러 2000년에는 북한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의 핵

25) Robert Zoellick,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p. 74; 오일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2002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1. 4. 26), pp. 2~4.

26) Michael Leifer, "The ASEAN Regional Forum: Extending ASEAN's Model of Regional Security," *Adelphi Paper 302* (London: IISS, 1996) 참조.

27) 균형자로서의 ARF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Segal, "How Insecure is Pacific Asia?," p. 247 참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동아시아 평화 유지를 위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북한 등이 왜 ARF에 가입하고, 또 자신들이 곁고롭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역내 다른 회원국들과 논의하는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역내 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측면은 자유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다자주의의 확대가 현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세력균형의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방법으로만은 불충분하며, 세력균형의 유지와 경제적 상호의존 및 다자주의의 제도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경제협력을 제도화함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안보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 안보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고자 할 때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역내 안보관계를 안정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ASR에도 나타났듯이 이 지역과 경제관계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아직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그 잠재적 안보위협을 고려할 때, 중국의 참여도 중요하다. 역내 증대하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남사군도 문제 해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그 안보목적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역내 불안정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는 APEC 체제의 발전은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APEC은 앞으로 동아시아의 번영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고, 탈냉전시대에 예상되는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28) 이호철, "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pp. 57~58, 김국진, "동아시아의 평화질서," pp. 207~208도 같은 맥락에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 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보상의 긴장요인들을 감소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⁹⁾

그러나 비록 APEC, ARF 등 지역내 다자 협의체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 사실이다. 유럽의 경우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의 특징 때문이다.³⁰⁾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된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냉전시대에도 이 지역에는 미·소를 중심으로 동맹그룹이 대치한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룹 내에서 간국이 존재했던 것만큼 공산주의 그룹 내에서도 상호 알력과 불신이 존재했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극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국가들의 집합이다. 경제적으로 각국은 부존자원, 산업구조, 무역구조, 경제발전도, 소득수준 등 모든 지표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중국·일본 등 강대국과 소국들이 혼재해 있고 문화적으로도 동서문화, 그리고 각종 종교적 배경이 상이한 이질적인 국가들이 어울려 있다. 셋째,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국내적으로 정치적 취약성이 존재하고 정치·사회적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넷째, 동아시아는 지역을 단위로 한 정체성이 부족하고 다자주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안보는 대체로 미국을 축으로 한 양자동맹의 틀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주도에 의한 다자간 경제협력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로 주목할 만한 것이 이 지역에서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

29) 이와 관련, 문정인은 향후 동아시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질서를 미국의 리더십에 의한 현상유지, 미국-일본의 양자패권, 일본의 군사화 혹은 중국의 지역패권에 따른 닫힌 지역주의,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하는 열린 지역주의, 그리고 유엔 주도하의 다자주의 등으로 예상하고, 열린 지역주의가 지역 협력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체제라고 강조한다. Moon, "Economic Interdependence," pp. 41~49.

30) Rosemary Foot, "Pacific Asia: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ialogue," in Louise Fawcett and Andrew Hurrell, eds.,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229~240;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안보대화,"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부상하는 새 지역질서』 (서울: 오름, 1998), pp. 319~343.

는 ‘국지적 경제협력지대(SREZs)’ 혹은 ‘자연경제지대(NETs)’이다.³¹⁾ 이러한 유형의 경제협력은 자원, 인력, 자금, 기술 등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 교류되는 것으로서 공식적인 정부간 경제협력이 아니라 인접한 국가들의 지방이나 도시들 사이에 대개 지방정부나 사기업들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경제협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한 국가가 억압적이고 제한적인 대외경제정책에서부터 국제적 경제교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변화를 시도했을 때, 국지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국지적 경제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또한 국제적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국경을 가로지른 지방간기업 간 경제협력이 허용되어야 한다. 적대관계에 있는 인접국가들간에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의 등장이 국지적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국지적 경제협력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리아우 지역과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지역을 잇는 이른바 ‘성장의 삼각지대(growth triangle)’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과 더불어 경제적 보완성이 뛰어나고 각국 정부와 관련 지방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경제특구와 개방지역 지정과 더불어 중국의 해안지방과 인근 국가들 사이에 국지적 경제협력지대가 등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선 가장 먼저 등장했고 그리고 가장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지적 경제지대로 중국의 광둥성과 복건성, 그리고 홍콩과 대만을 연결하는

31) Robert A. Scalapino, "Pacific-Asian Regionalism and the Korean Role," in Kee,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pp. 237~242; Amost A. Jordan and Jane Khann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the Emergence of Natural Economic Territories in the Asia Pacific,"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8, No. 2 (Winter 1995), pp. 433~462; Cossa & Khanna, "East Asi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Security," pp. 225~231; 정진영,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167~172.

대화남 경제권(Greater South China Zone)을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산둥반도, 발해만 지역과 한국의 서해안, 일본의 큐슈를 잇는 황해경제권(Yellow Sea Economic Zone)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산둥성과 동북부 지방으로 투자되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관서지방, 한국의 동해안 지역, 중국의 동북부와 만주지역,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포괄하는 동해경제권(East Sea Economic Zone)의 개발에는 일본의 니가타 지방과 한국의 강원도 지방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³²⁾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지적 경제협력지대라는 특수한 유형의 지역경제협력이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동아시아에서 국가 주도의 다자간 협력의 발전이 늦기 때문이다. 즉, 역내 정치·경제체제의 이질성,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군사적 갈등구조의 상존, 다자 조약 체결 경험 부족 등 국가 주도의 다자주의의 확대를 더디게 하는 요인들이 바로 하위체계에서의 국지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APEC 등 국가간 공식적 다자 협력체와 국지적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지적 경제협력이 심화될 경우 이 지역 사이에는 그들이 속한 중앙정부들간의 정치·안보적 긴장이 가져올 경제적 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 만큼, 중앙정부들이 보다 협력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V. 동북아 협력과 통일, 그리고 한국의 역할

동아시아 지역국가 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이 조화를 이루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국도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는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우선 한반도가 동북아의 대표적인 위험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교류협력의 증진은 동아시아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

32) *Ibid.*, pp. 168~170.

다. 한편, 역내 국가 간 협력증진과 다자주의의 확대는 남북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럽과 독일통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 및 안보협력의 확대와 이와 병행한 남북교류의 증진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APEC, ARF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대화체(NEASED)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 중국, 미국과 함께 4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앞으로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함과 동시에 국지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한반도의 분단은 내부적 요인에도 기인하지만 국제적 요인이 보다 많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은 19세기부터 서로의 동아시아에서 각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 4강은 최소한 한 번씩은 경쟁국과의 첨예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제2차세계 대전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전쟁,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중국의 대립, 1950~60년대의 중소대립, 냉전기간 미소간의 첨예한 갈등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한 한반도는 항상 주요 경쟁의 대상이었고, 이는 분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구한말 시기에는 중국과 일본, 혹은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을 분할 점령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결국 2차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 및 중국의 개입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더욱 국제화하였다. 아울러 냉전기간 미소의 대결은 남북대결을 확대 재생산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은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때 비로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냉전시기까지의 주변국간 갈등과 대립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북아 및 한반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협력보다는 우선 하부 지역별로

국지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포함된 국지적 경제협력권 중 황해경제권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동해경제권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유역개발을 주도하는 등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들 사이의 갈등조절이 쉽지 않고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문제 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관련국은 물론 관련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해경제권의 개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을 황해경제권 및 동해경제권에 참여시켜 남북교류와 지역 경제협력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지적 경제협력에서는 국가의 역할보다 지방정부 및 기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남부간 상호 불신 및 정치·군사적 긴장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이미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지역협력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1991년 동해경제권의 나진·선봉지역을 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최근 황해경제권에 속하는 신의주를 특구로 지정한 것은 북한이 지역경제협력의 참여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희석시킬 수 있다. 넷째, 따라서 남북교류와 지역 경제협력의 상승작용을 통한 '호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인 개성공단 조성이 황해경제권과 연계될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조성 사업에 보다 적극성을 띠 것이며, 이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협력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의주 특구 개발에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이 중국횡단철도(TCR)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될 경우, 한반도는 지역경제권의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경제권을 연계시킴으로써 동북아의 경제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통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변국들은 각기 한반도를 경쟁국가 자신에 대한 '공격용 발판'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는 한반도 분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주변 강대국들이 이

런 인식을 계속 지니고 있을 경우, 그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며, 그만큼 통일은 어려워 질 것이다. 반면,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경우, 주변국들은 한반도를 '경제협력의 발판'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며, 그만큼 한반도 통일 과정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명세.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가능할 것인가?” 진창수 편. 『동북아시아에
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2).
- 권호연. “동아시아의 갈등요인: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김태현 편. 『신동
아시아 안보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1997).
- 김국진. “동아시아의 평화질서.”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부상하는 새 지역질서』 (서울: 오름, 1998).
- 김태현. “신세계질서와 동아시아: 한국의 선택.”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
보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1997).
- 박변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1. 11).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
pub_key=db20011103&search_gubun=1 &sYear=2001](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11103&search_gubun=1 &sYear=2001).
- 안청시. “21세기 동북아 안보질서.”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
국 I: 부상하는 새 지역질서』 (서울: 오름, 1998).
- 이호철. “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안보와 경제의 상호관계.” 『국제정치
경제연구』 (1997. 12).
- 오일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2002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1. 4. 26).
- 정진영.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동아시아 불안정론에 대한 비판.”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1997).
- 한태준.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경제낙관론에 대한 비판.”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1997).
- 홍규덕. “동아시아의 지역분쟁.”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1997).
- Buzan, Barry and Segal, Gerald.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 (Summer 1994).
- Cossa, Ralph A. & Khanna, Jane. “East Asi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 (April 1997).

- Doyle, Michael.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 Foot, Rosemary. "Pacific Asia: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ialogue." in *Fawcett, Louise and Hurrell, Andrew. eds.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Friedberg, Aaron.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 _____. "Warring States: Theoretical Models of Asia Pacific Securit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18, No. 2 (Spring 1996).
- Huh, Tae-hoi.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s in the Asia-Pacific." *Asian Perspective*, Vol. 21, No. 1 (Spring-Summer 1997).
- Kee, Woo Sik et al.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Issues and Prospects*.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5.
- Leifer, Michael. "The ASEAN Regional Forum: Extending ASEAN's Model of Regional Security." *Adelphi Paper* 302. London: IISS, 1996.
- Moon, Chung-i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Implications for Security in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Vol. 19, No. 2 (Fall-Winter 1995).
- Nye, Joseph S.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July/August 1995).
- Patterson, Dennis. "Security in Post-Cold War Northeast Asia: The Problem of Theory." in Kwang Il Baek, ed. *Comprehensive Security and Multilateralism in Post-Cold War East Asia*. Seoul: KAIS, 1998.

- Pollack, Jonathan. "Sources of Instability and Conflict in Northeast Asia." *Arms Control Today* (November 1994).
- Richardson, James.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Vol. 38 (Winter 1994 /95).
- Segal, Gerald. "How Insecure is Pacific Asia?"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 (April 1997).
- _____. "East Asia and the 'Constrain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Spring 1996).
- Shambaugh, David. "Growing Strong: China's Challenge to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 (Summer 1994).
- Wan, Ming. "Wealth and Power: Economic Transformation of Securit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18, No. 2 (Spring 1996).
- Yahuda, Michael.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Asia-Pacific*. London: Routledge, 1996.
-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 Zoellick, Robert.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